

18대 총선 평가와 진보정치

홍재우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위원)

- I. 총선의 세 가지 현상
- II. 진보의 몰락은 진보세력의 탓
- III. 진보세력의 할 일

제 18대 총선결과 한나라당이 153석(비례대표 22석), 민주당이 81석(15석), 자유선진당이 18석(4석), 친박연대가 14석(8석), 민주노동당이 5석(3석), 창조한국당이 3석(2석), 무소속이 25석을 차지했으며, 전국 투표율은 46%를 기록했다. 선거결과라는 것은 이런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으로 선거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으나 이미 같이 단순한 수치로 나타난 선거결과를 평가하는 수많은 기사, 칼럼, 대담 등이 쏟아져 나왔다. 언론인, 정치평론가, 정치학·법학·사회학 교수 등이 주로 참여한 이런 분석들은 각론적으로는 백가쟁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상당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 글도 아마 그런 평가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앞으로 1~2년 내에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론에 기반 한 세련된 선거결과 분석은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것이지만, 아직 선거용지의 잉크가 마른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평가들은 거칠지만 그 다양함과 공통성을 바탕으로 현실정치를 이해하고 그것의 변화를 추동하는데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짧은 내용도 지난 일주일 간에 쏟아진 다른 담론들과 마찬가지로 정치(精緻)하고 세련된 분석이라 자신할 수는 없다. 판단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긴다.

I. 총선의 세 가지 현상

지난 1주일간 쏟아진 대부분의 분석들은 몇 가지 현상에 주목하고 그 현상에 대해 공통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현저하게 낮아진 투표율이다. 46%의 투표율은 지난 17대 총선이 보여준 60%와 비교하여 현격히 낮아진 것인데 이것은 2004년에 투표한 네 명 중 한 명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25%가 하락 한 것이며 1988년 민주화 이후 첫 총선과 비교한다면 반 토막이 난 수치이다. 2000년 이후 아시아에서 이렇게 낮은 투표율을 보인 나라는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대의 투표율이 18%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며 지역구에서 30% 이하의 투표율을 보인 지역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선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지극히 우려할만한 민주주의의 후퇴로 파악하고 있다. 이 현상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 외면, 실망, 혐오증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바이고 이에 더해져 실제로 정치로부터 대중이 소외당했기 때문이라는, 국민이 정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버린 것이라는 분석도 일리 있게 들린다.

둘째, 정당정치, 정책선거, 참여민주주의의 실종이다. 명목상으로 볼 때, 이번 총선에 참여한 정당 중 지난 17대 총선에서 존재했던 정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뿐이다. 통합민주당은 길고 긴 이합집산의 길을 거쳐 17대 대선이 끝난 후에야 간신히 한 정당의 간판 아래 모였고,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불과 몇 개월짜리 신생정당들이다. 심지어 친박연대라는 희극적인 이름의 정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정당지도자 1인을 지지하는 것 하나로 결성되었고, 더욱이 그 지도자는 다른 정당 소속이라는 전 세계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정당의 한 예로 등록될 것이다 (그 희극은 그 누구도 잘 모르던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1번에 대한 논란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런 급조된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정책선거 역시 실종되었다. 여당은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정책(대운하)을 공약집에서 삭제하는 꼼수를 부렸고, 야당들은 어떤 정책에도 각을 세우거나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실패했다. 실제로 정책적 차이를 드러낼 이슈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차이가 화제가 되었던 것은 이재오-문국현의 대결이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또한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천 작업이 완료되었고 그 공천에는 일반 유권자나 당원들이 참여할 기회는 거의 완벽하게 봉쇄되었다. 또 선거법 탓에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에 대해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지 못했음은 물론, 선관위의 지나친 권한확대와 이해할 수 없는 유권해석 등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장은 완전히 사라졌다. 과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낙선낙천 운동 같은 것이 아예 시작도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어딘가 모자라고 희극적

이며 불행하기까지 한 선거였다.

셋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작년 대선이 한나라당의 경선 결과를 추진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대선은 경선의 제2라운드였을 뿐이었다. 그 만큼 범 진보진영의 몰락이 두드러졌다. 물론 평가에 따라선 진보가 나름대로 방어했다는 평가(박명립)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진중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진보 혹은 비보수 정치세력들이 권력의 중심무대에서 밀려난 것은 틀림없다. 통합민주당은 2004년 열린우리당에 비해 절반이 조금 넘는 성적을 얻는데 그쳤고, 민주노동당은 분열되어 절반의 의석을 얻는데 그쳤다. 사천의 강기갑의원이 생환하고 민주당이 영남에서 2석을 얻는 등 쓰라린 마음을 달래려고 강조하는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심상정/노회찬 의원의 패배, 이인영, 임종석 등 거의 모든 386 의원들의 몰락, 무엇보다 김근태 의원의 어처구니없는 낙선의 상처를 덮어주기에는 한참 모자라 보인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수많은 진단이 있지만 가장 공명을 울리는 것은 "욕망의 정치"가 전면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정치란 것이 원래 욕망의 실현을 위한 행위들의 집합체이지만, 경제적 이익이 지극히 민감한 유권자 집단의 등장은 적어도 한국정치에 있어서는 새로운 현상이다. 문제는 그 경제적 이익이 "투기와 대박"이라는 한국사회의 현상을 기형적으로 반영했다는 데 있다. 아직도 지역주의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특히 기존의 한나라당의 아성인 강남지역을 제외하고도 중산층이 밀집된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묻지마" 지지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것은 계급정치의 출현하고는 아직 거리가 먼 현상이다. 대중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충실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상승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대안에 표를 던지는 것이다. 공동체의 집단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이 개선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만이라도 살아남겠다는 발버둥인 것이다. 그 살아남는 길이 노동의 대가나 건전한 저축이 아니라 투기와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달렸다는 것을 지난 30년간 특히 지난 5년간 대중들은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 경험은 그들의 정치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지난 대선에서 목도하지 않았는가? 대중은 시장주의자들도 아니다. 그들은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파기하는 자(rule breaker)에게도 아무런 윤리적 갈등 없이 표를 던졌다. 이번 총선결과도 그 욕망의 목적이 비교적 모호했던 대선에 비해 "뉴타운" 등의 모습으로 구체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II. 진보의 몰락은 진보세력의 탓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현상 가운데 진보의 몰락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 진보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정당이 진보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보다 진보적인 정당일 수록 자기 당의 오른쪽 정당은 진보가 아니라고 정의하지만, 그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치적 언어와는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주장일 것이다. 어찌되었던 한나라당의 왼쪽에 있는 모든 정당과 정파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거 장외세력으로 몰려있게 되었다. 진보의 몰락을 진단하는 목소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부분적으로 다 옳은 말들이다. 아마도 그런 분석의 총합은 진보의 몰락을 설명하는 그럴듯한 설명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보세력의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진보세력의 잘못"이라고 요약된다. 진보의 몰락은 그 누구 탓도 아니고 진보세력의 탓이라는 말이다.

그럼 무슨 잘못을 했을까? 여러 이유들의 길고 긴 리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겠으나 한마디로 진보의 잘못은 정치적이기 못했다라는 점이다. 그들은 우선 지지층을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열린우리당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지지를 확고한 지지층으로 만드는데 실패했고, 민주노동당 또한 핵심적 지지층을 벗어난 비이데올로기적이며 동시에 보수세력에 비판적인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데 실패했다. 굳건한 지지층의 건설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는데 있어 알파요 오메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정권도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당과 정치인은 자신이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지지층에게 무엇이 자신들의 이익인지를 명확히 정의해 줘야 하며 그것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진보세력은 이런 일에 미숙했다. 즉, 진보는 대중들에게 줄 것이 없었으며 준 것도 없었고 앞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도 못 만들어졌다. 반면에 한나라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세력은 대중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혹은 완전한 사기극이든 상관없이 한나라당은 먹고살기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다. 긍정적으로 이 기대를 품은 사람들

은 한나라당에 투표했던 것이고 이것이 부정적인 기대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기권을 택했다. 실제로 절대로 한나라당이나 보수진영에 투표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들은 유권자의 약 30~35%를 대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투표장에 나오질 않았다.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진보세력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 범주의 유권자들 15~20%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한나라당이나 보수세력을 선택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에 맞다고 생각한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선택을 했을 뿐이다.

Ⅲ. 진보세력의 할 일

자 그럼 이제 진보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은 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질 것인가이다.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에게는 던질 수 있는 질문이지만 통합민주당에게 이 질문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경향신문(2008. 4.15)이 조사한 통합민주당 당선자들의 이념적 좌표를 보면 당이 현재보다 중도적 혹은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25%에 달했으며, 탈이념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상 우향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47.2%에 달했다. 현재보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라고 말한 당선자는 25%에 불과했다. 한미 FTA비준 반대 의견은 11.1%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의 할 일을 운운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고, 현재 최소한 마련되어 있는 견제의 장치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 통합민주당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되는 진보세력의 할 일에는 통합민주당 역시 포함된다 할 수 있으며 특히 원외에 머물게 된 민주화 세력들은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우선 정책대결을 해야 한다. 이 말은 정책대결이 진정한 정당정치이기 때문이고 발전된 민주주의 정치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조언이 아니다. 비판과 견제가 야당의 주요 임무이기는 하지만 네거티브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충분히 경험한 바이다. 정책대결은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경제성장의 달콤한 약속들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내외적인 환경도 그러하거니와 정권의 특성상 불도저식의 정책집행은 큰 역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정책이 성공한다 해도

그 결과는 양극화의 심화이며 가진 자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 분명하다. 또 포용보다는 배제에 익숙한 CEO식 경영을 정치에 도입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치적 분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윤리적 판단기준을 마비시킨 채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인내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바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유권자층이 누구인지를 빨리 간파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국가경제'나 모든 국민을 위한다는 환상 따위는 버리고 어떤 계층의 대중에게 지지를 얻을 것인지를 분명해 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소외받는 집단들에게 '진보적 가치를 지닌 대안'이 분명히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최소한 보수세력의 독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해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추구했던 4대개혁입법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누구에게 이익인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한 사학재단 등의 강력한 반대층만 형성했지, 그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집단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 이에 비해 등록금 상한제나 공공의료보험 제도의 유지 등은 그 수혜를 받는 집단이 명확하다. 이런 정책에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나가고 지지층들을 결속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서구의 좌파 정당들은 대개 복지 문제 때문에 노인층의 지지를 받는데 비해 한국 사회가 과거 전쟁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때문에 노인층에서의 보수세력 지지는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이제 변화하고 있다. 중장년으로 넘어가면서 의료 및 노후 문제는 그들의 세계관과 정치적 견해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선점하지 못하면 진보세력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민주당은 몇 가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민주당 내 낙선한 개혁세력이나 진보세력은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 등에 반드시 역량을 집중해 가능한 원내로 최대한 진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원외라고 해서 당내 세력 경쟁에서 결코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된다. 진보적 계파를 형성해서 당 저변에서 지지를 확충하고 보궐 선거 등에 통합된 힘으로 후보를 만들어내고 당선시켜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처럼 2년에 한 번씩 노른자 상임위 자리를 위해 자리를 교체하지 말고, 4년 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정책 전문성을

최대한 키워야 할 것이다. 비인기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당직에서 해택을 주는 방안을 찾으려 한다. 무엇보다 각 야당 상임위의 간사들을 통해 일종의 그림자내각(Shadow Cabinet)을 만들어야 한다. 상임위별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여당의 상임위원장이나 간사가 아니라 내각의 각료를 상대하는 전문적인 인물들을 키워나가야 한다. 정당의 몇 세대 앞을 책임질 진보적이며 전문성을 지닌 리더들을 이런 과정에서 키워야 외부영입이나 이합집산으로 인한 정당의 몰락과 무력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여당의 정책에 대해 "그것은 안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책대결은 공자님 말씀도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 아니다. 정책형성과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해 진보적 역량을 비축하고 이를 통해 무엇보다 새로운 지지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사실상 진보의 할 일이라는 말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게 해야 하는 말일 지도 모른다. 양당이 진보의 회복을 위해 할 일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이다. 첫째, 분열을 극복하고 차이를 인정한 가운데서 한 정당으로 모여야 한다. 당세가 현격히 축소되었고 또 지난 2004년처럼 캐스팅 보트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활동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양 진영이 다시 합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진영에서는 통합을 이야기 하지만 오히려 원내 진출에 실패한 진보신당은 이에 적극적이지 않다. 진보신당의 대표적인 논객인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민노당이 결국 전국연합이나 한총련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당내를 향한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다. 진보신당 입장에서는 지난 10년의 경험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소위 자주파나 주사파가 함께 하늘아래 있지 못할 세력으로 간주하겠지만 대중들이 볼 때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진보신당의 노선이 아무리 옳았다 하더라도, 양당의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진보신당 또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진중권은 "10년간 쌓아온 상징 자본을 몽땅 민노당에 넘겨 준 채 빈손으로 뛰쳐나온 정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에 근접한 득표율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라고 했지만 진보신당은 상징 자본을 놓고 나옴과 동시에 남아있는 민노당에 "중복주의"라는 주홍 글씨의 낙인을 찍고 나왔다.

사실 민노당이 2004년에 당선시킨 10명의 의원들의 성향만을 놓고 볼 때, 자주파로 분명하게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평등파이거나 어느 쪽도 아닌 사람들이었다. 당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야 평등파와 자주파 어느 한 쪽에 대한 감정적 양금이 많이 남아 있을 테지만 그건 진보세력의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이 상황에 있어 그리 큰 문제가 아니

다. 선거에 졌다고 해서,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 대결에서 패했다고 해서 당을 깨고 나간다면 그것은 보수정치인의 행태와 전혀 다르지 않다. 서구 좌파정당들의 긴 역사를 보면 분열해 나가서 잘된 진보정당은 거의 없다. 패배하고 싸우는 일도 모두 당의 울타리를 지키면서 해왔다. 지난 일에 대한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민주노동당이 분열하지 않았다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든 18대 국회에서도 17대 국회만큼의 성과를 올리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앞으로 한 정당의 지붕 밑에서 지내지는 못할지라도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정당연합이라도 형성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도권 정치에 발을 디딘 바에야 제도권 정치가 주는 혜택과 방법을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다.

둘째, 유연성의 정치를 해야 한다. 원칙의 정치도 중요하지만 유연한 정치도 필요하다. 유연성은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 17대 총선에서 민노당은 민주당과 함께 원내교섭단체를 결성할 기회가 있었다. 당 색깔도 다른 정당이지만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했을 경우, 국회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몇 석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 자리가 얼마나 차이를 만든다고?"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건 정치적 아마추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 원내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민주당과 정책적으로 함께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민노당은 그런 유연성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17대 국회 내내 민노당은 원내 의원들을 단순히 민노당이 과격한 대표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의원들이 의회정치의 자율성을 충분히 만끽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혹 의원들이 사심을 품지 않을까 감시하고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하는데만 집중했다. 민노당의 원내 활동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원외당의 간섭이 지나쳤던 데도 이유가 있다.

유연성의 또 다른 측면은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 과정에도 적용된다. 비례대표 당선자의 예상 의석수가 다섯 석도 안 되는 상황에서 1번 여성장애인, 2번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은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이상적이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개인적 능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적 역량을 감안할 때, 이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는 물어보아야 한다. 원내 활동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셋째, 다른 정당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 보수주의의 광풍 속에서 두 진보정당 사이는 물론 이 슈별로 민주당과의 협력도 나서야 하고, 대운하 반대를 위해서는 심지어 친박연대나 선진한국당



과의 연대에도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창조한국당과 협력하고 그 대가로 노동자 권익을 위해서는 협력을 받아내야만 한다. 주고받고 타협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요약하자면 진보정치가 살아남고 권력을 획득하는 길은 "진보"와 "정치"라는 말 그 자체에 담겨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진보는 생존할 수 없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 그저 반대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보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진보는 보다 많은 대중을 위한 목표를 세우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만 않으면 그 진보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정치의 본령은 권력을 통해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이며 여기는 타협과 투쟁에 대한 면밀한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진보정치와 그 세력이 누구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지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지지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은 동시에 대중의 자기파괴적 욕망에 편승하는 보수정치의 모습을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다. 진보적 대안이 그들이 받아들이고 지지해야 하는 가장 현실적인 노선과 방법임을 주지시키고 그 대안의 깃발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진보"와 "정치"가 실현될 때, 진보세력은 다시 역사의 주역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8/04/16)

